

특집
논문

‘어글리 코리안’의 마주침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¹⁾

오혜민 _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논문요약

본 논문은 1965년부터 1970년대 초반, 1980년대 후반 ‘어글리 코리안’이란 단어가 활용된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베트남 파병,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노동이주, 서울올림픽, 해외여행 자유화 등 큰 마주침 사건과 함께 유포된 이 단어는 외교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을 가리거나 국가 통제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데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 유행어의 기억은 일상생활의 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냉전 이후 ‘새로운 한국’이라는 환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맥락에 따라 단어가 활용된 의도는 달랐지만, 이 단어가 ‘한국인’과 ‘한국’의 경계를 구획하는 효과를 만들었다는 점은 동일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한다. 첫째, ‘타자’의 상상된 시선을 통해 ‘추한’ 행위들이 지적되며 국가적, 자본주의적 이익과 연관된 규범이 강화된다. 둘째, ‘한국인’이라는 범주가 사회 전반에 침투, 구별짓기의 과정이 일상화된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 ‘낯선’ 것들은 ‘타자’의 형상을 그려낸다.

■ 주요어: 어글리 코리안, 해외여행 자유화, 타자화, 국가정체성

1)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원에 의한 논문이다. 드 세르토(2013)의 부제 ‘근대 초 악마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을 차용한 제목이다.

DOI: <http://dx.doi.org/10.31008/MV.40.1>

1. 시작하며

본 연구는 1965년부터 1970년대 초,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1989년까지의 ‘어글리 코리안’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의 집단 이주 혹은 마주침 사건들에서 발생하는 범주화와 규범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며 국가 기반 정체성이 확립되어 간 방식에 집중한다.²⁾ 베트남전쟁 파병, 서울을 립픽, 해외여행 자유화 등 굵직한 ‘이주’ 사건들과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용어의 활용 배경을 함께 추적해 봄으로써, 이 단어가 각 시점에 어떤 목표로 유포되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2005년을 전후로 전개된 ‘다문화주의’ 담론의 형성을 비롯하여 현재의 이주 정책에서 역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인 대 타자’의 전제들을 다시 고찰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첫 질문은 허구적으로 구성된 민족국가와 국가 정체성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일상 속에서 ‘국가 기반 정체성’이 ‘(외국인으로서의) 타자’로 인지되는 사람들을 서술하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장면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된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 명명의 방식은 부정적인 묘사와 함께 덧붙여질 때는 차별이라는 지적에 직면했지만, 긍정적인 묘사와 함께 활용되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 제기

2) 본 연구에서 ‘마주침’은 집단 이주가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과 동시에 추상적 ‘우리’와 ‘타자’와의 조우로 해석된 사건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지리적 이동에 초점을 맞춘 ‘이주’라는 단어로는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보고자 하는 사건을 모두 묶어낼 수 없기에 해당 단어를 활용한다.

없이 유통되었다. ‘한국인’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어떤 공고한 경계를 가진 것인 양, 계속해서 ‘우리’ 대 ‘타인’의 구별을 전제하는 논의는 그래서 언제나 ‘다양성’에 대한 ‘관용’, ‘문화적 차이’, ‘차이의 존중’으로만 귀결되었다. 차별적 의도든 반 차별적 의도에서든 타자에 대한 구별짓기가 언제나 차별의 선행조건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사회적 분위기, 예산과 정책적 목표 등의 변화를 이유로 한순간에 뒤집어질 위험한 방식이라는 점은 계속해서 간과되었다. “그 대상이 되는 요소를 주인 안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그 대상의 타자성을 계속 유지”시키며,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면서 특정한 대상을 편입을 통해 관리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외부인의 자리를, 더 나아가 정치체나 사회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의 자리를 할당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미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있는 국가 정체성과 타자 구별의 과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브라운 2010, 62-63; Anderson 2006, 5-7).

본격적인 첫 ‘마주침’이라고 상상했던 해외여행 자유화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 ‘마주침’의 과정에 생각보다 많은 지침이 각기 다른 이유로 개입되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활용되었다는 것 역시 감지했다. ‘어글리 코리안’³⁾이라는 단어는 1965년 발간된 김진만의 수필집 『어글리

3) 현재까지 어글리 코리언, 어글리 코리언, 어글리 코리안 등의 단어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현재는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용어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한다.

코리언』에 대한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언론에 소개되었으며(조선일보 1965/05/13; 경향신문 1965/05/19; 동아일보 1965/05/25), 1967년 베트남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의 집단 노동 이주, 1988년 서울올림픽,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 시행, 최근의 ‘다문화’와 관련된 논의에 이르기까지, ‘외부’ 혹은 ‘외부인(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대상)과의 마주침 사건과 맞물려 각기 다른 목적으로 계속 그 모습을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유통되었다.

1965년부터 최근까지 ‘어글리 코리안’ 단어가 활용되어온 배경과 효과를 살펴보는 작업이 ‘한국인’의 경계를 구획해나가는 구별짓기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어글리’한 행위들에 대한 지적을 통해 ‘건전한 이주, 이동, 여행의 상이 제시되며 국가적,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규범이 확립된다. 2) ‘코리안’이라는 허구적 정체성 범주의 강조를 통해 국가 기반 정체성에 따른 구별짓기 방식이 일상적으로 구축되고 강화된다. 3) 규범에서 벗어난 ‘으스스한(unheimlich)’ 것, 위반적인 것들은 일상 속에서 ‘어글리’한 동시에 ‘이질적인 것’으로 인지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겨진 기억은 ‘자기 검열’의 기제로 작동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 행위를 수행한 상대방을 ‘타자’의 범주 내로 귀결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1965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 그리고 ‘어글리 코리안’의 실종과 부활이 이루어졌던 1988년 서울올림픽 이전의 시기와 「해외여행 자유화정책」 시

행 후 1년까지인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시기에 주목한다. 그리고 신문윤리위원회 설치, 언론사 내 기관원 상주, 보도지침 제시, 높은 신문정기구독 비율 등 해당 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첫 주요 분석 자료로 신문 기사를 선정했다.⁴⁾ 이 시기의 주요 일간지 기사 245건을 우선 살펴봄에 각 사건과 ‘어글리 코리아’의 묘사 방식, 발화자와 발화 방식 등의 요소들을 짚어냈다.⁵⁾ 1차 자료인 기사에서의 서술 방식들을 분석해나가는 동시에 기사와 연관성을 가진 정책 자료와 선행연구들, 해당 주제 및 사건과 관련하여 일상 속에 깊이 자리매김했을 것으로 간주되는 영화, 노래, 소설 등의 추가 자료들 역시 보충적으로 활용하였다.

-
- 4) 쇼이펠레(Scheufele)는 프레임링 개념을 제시 미디어와 개인의 관계를 미디어와 수신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한다. 개인의 경험,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매스미디어로부터 해석된 선택들이 현실을 구성한다고 보며, 프레임이 특정 가치, 사실, 요소 등을 강조, 겉으로 보이는 것 외의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Scheufele 1999, 105, 115-117). 넬슨(Nelson) 등은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토대로 개인의 행위 결정과정에서 미디어가 끼치는 심리적 영향을 분석하며, 어떤 행위에 대한 선택지가 개인의 기억 속에 있어야 하며, 관련 지식이 사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Nelson et al. 2015, 2884). 1964년 9월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소심의와 자율심의 등 권한 확대, 1960년대 중반 이후 언론사에 기관원이 상주, 지면에 개입했던 박정희 정권의 특성과 1969년 전국 가구의 50%에 달한 신문 정기구독 비율(채백 2014, 9-10; 이봉범 2011, 415), 그리고 보도지침 등을 마련 언론 통제를 일상화했던 80년대를 보았을 때(송진호 외 2012, 486-499), 프레임링의 한 종류로 언론을 통한 ‘어글리 코리아’의 유포 양상을 조망하며, 이후 나타난 결과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5) ‘어글리 코리아’, ‘어글리 코리아’ 두 가지 키워드로 검색했으며,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와 조선일보 아카이브 검색을 통해 진행했다. 1990년까지의 분석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 조선일보다. 이 기간 중 245건의 기사들을 통해 전반적 흐름을 짚었으며, 본 연구에 유의미하게 인용된 기사의 경우 아래 참고문헌 목록에 상세한 정보를 언급했다.

각각의 마주침 사건들에서 ‘국가 정체성’이라는 마법의 원⁶⁾을 그려가는 과정을 ‘건전’ 여행자와 ‘모범 선주민’ 및 ‘모범 이주민’ 등의 제시 방식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는 본 연구가, ‘출신 국가 정체성’을 전제로 둔 기존의 이주 연구와는 다른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주길, 차별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을 상상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해본다.

2. 선행 연구 및 이론적 토대

‘어글리 코리안’ 혹은 ‘어글리 코리언’은 60년대 중반 이후, 대다수 사람들이 접해 본 적 있는 단어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이주 연구 분야에서 이 단어를 출발점으로 삼은 연구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최소한 다른 맥락, 목적에서라도 언어적 표현을 분석한 선행 연구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어긋났다. ‘한국인 정체성’, ‘국가 정체성’, ‘한국인’, ‘반한 감정’ 등의 관련 주제 어들로 찾은 연구 역시 이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단어에는 주목하지 않았으며, 대다수는 ‘타자’로 간주해왔던 국경 안팎의 집단들 혹은 전근대적 역사적 사건들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했다. 한국 내의 이주/다문화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들의 필요성을 - 특히 본 연구 주제와 비슷한 방

6) 세르토는 17세기 마귀들림 사건을 ‘연극’ 혹은 ‘쇼’로 서술하면서, 이때 등장한 환영이 마치 실재하는 것처럼 인식, 무대 위의 인물뿐만 아니라 관객까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미 그 연극의 자체적 규칙에 복속하게 되는 공간을 ‘마법의 원’이라 설명한다(드 세르토 2013, 50-62).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 짚어내는 저작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윤인진·황정미(편) 2014; 오경석 외 2009; 김희강 외 2016; 김원 외 2011), 아직 이 단어가 이주 연구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다.

한편, ‘한국인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연구를 검토한 결과, 일상 속 한국인 정체성, 국가 정체성의 위치를 다루는 연구들은 최근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집단 등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 및 정도를 측정하고, 다문화의 수용 가능성을 고민하는 연구들이 있었으며(박윤경 2014; 손애리 2015; 김금미 2010; 황정미 외 2007),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일상 속에서 한국 고유의 문화, 한국인 고유의 정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자 시도하며 그 특수성이 전승되기를 기대하는 연구도 있었다(황병기 2014).

주로 베네딕트 앤더슨의 이론을 인용, 국가 정체성으로서의 한국인 정체성 범주가 구성되었음을 밝히고 마무리 짓는 연구들 역시 살펴보았다. 사회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글로벌 시대의 당위로서의 국가 정체성의 새로운 구성을 요구하는 연구(남호엽·차보은 2017), 국사, 식민지배와 민족주의 등 한국인 정체성의 확립과 관련된 몇 가지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훑으며 구성물로서의 한국인 정체성을 살펴본 뒤, 노령화 사회가 될 미래를 위해 관용적이자 한국화된 ‘비빔밥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연구(김기봉 2010), 한국 내에 거주 중이며 국적상 한국인이지만 일상 속 타자로 간주되는 이주 배경 집단들을 조망하며 기존의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혼종적 정체성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한국인

정체성 범주의 혼종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 재외동포법, 토지법, 국적법 등의 법규를 분석하며 집단들에 대한 법적 접근에서 드러나는 내서널리즘과 글로벌리즘의 복잡한 작용을 읽어내고자 시도하는 연구 등이 있었다(김순남 2017; 김현미 외 2013; 장인옥·김현아 2014; 박선웅·우현정 2013; 이철우 2003).⁷⁾ 이 연구들은 현재 존재하는 ‘단일한 한국인상’에 대한 인식들이 현재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차이들을 배제하므로 문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한국인’이라는 경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고 각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재까지 발휘됐는지를 살펴보는 데에는 오히려 주목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는 오히려 풍성했다. 우선 본 연구의 아이디어는 타자성에 대한 통찰이 담긴 미셸 드 세르토의 책과 정동을 다룬 그레그·시그워스의 책에 수록된 브라이언 마수미의 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세르토와 마수미의 방식들, 피터 듀스의 저작은 그 내용을 참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식적,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지침으로도 활용되었다(드 세르토 2013; Duus 1998; 마수미 2010). 여기에 문화를 “특정한 역사, 특정한 정치적 담론의 효과”로 정의하며, 집단적 상징으로 상징하고 ‘문화적 차이’를 구성하는 기호들을 살펴

7) ‘한국인 정체성’ 관련 연구들의 목록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검토하는 이주 연구들이 - 국경을 기준으로 한 집단의 이동에 대한 연구 외에는 - 거의 없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역사적 사건들에 기반을 둔 이주연구들이 한국인의 특정한 특질이 있을 것을 전제하면서 이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형하거나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본 스콧의 논의(Scott 2007, 7, 73)와, 이질적인 것, 서로 병존하는 인식들의 배치나 실천들의 분포에 대처하는 것으로써 문화적 차이의 문제를 보고자 한 바바의 논의(바바 2012, 205, 349-351), 베네딕트 앤더슨, 웬디 브라운의 논의 역시 활용되었다(Anderson 2006; 브라운 2010). 마지막으로 미디어와 개인의 관계, 심리적 영향과 효과, 정부의 언론 통제와 관련하여서는 쇼이펠레와 넬슨, 채백 등의 논의를 보충적으로 참고하였다(Scheufele 1999; Nelson et al. 2015; 채백 2014; 2015).

3. 그 모든 법석: ‘어글리 코리언’의 탄생⁸⁾

‘어글리 코리언’은 이른바 ‘글로벌 교양’, ‘글로벌 매너’를 갖출 것을 촉구하는 방식에서 위반 행위의 대명사로서, 주로 ‘외국인이 본 한국인’에 대한 서술과 함께 등장한다. “나라 망신”을 시킬 수 있는 “언행, 매너, 에티켓, 악습” 등 “타인이 보기에 혐오감을 주는 많은 행동”을 수치스럽게 여기라는 맥락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드러내지 않게 ‘국제 표준’을 준수하라는 맥락에서 이 단어는 반복되어 사용되며, 이 서술은 “경제 수준에 걸맞은 국민의식 수준”을 갖추고 이른바 “뷰티풀 코리언”의 면모

8) 허위가 ‘최상급’ 실재적 우위를 점하는 경험을 불이 나지 않았을 때도 화제 경보에 놀라는 것 같은 기호-사건으로 설명하는 마수미가 쓴 표현을 차용했다. 기호가 그 자체를 몸에 들이치는 것과 이에 대한 “반동으로”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행위자와 피해위자로 구별될 수 없는” 저항의 과정 등이 이 ‘어글리 코리언’의 기호와 맞닿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마수미 2010, 122-125).

를 갖출 것을 주문하는 식으로 귀결된다(김상철 2008, 43-44, 283; 김영환 외 2011, 1, 111-112; 경향신문 1978/12/26; 1978/05/29; 세계일보 2007/05/22).

‘어글리 코리아’는 2005년 해외에서 일으키는 사회문제에 대한 법적 제재 검토를 다룬 기사에서 구성될 ‘국가이미지개선협의체(가칭)’의 주요 표적으로(문화체육관광부 2009; 헤럴드경제 2005/11/05; 중앙일보 2005/11/21; 경향신문 2004/11/22), 2000년대 중반부터 유포된 다문화 담론의 맥락에서 한국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차별 행위자를 지칭하고자(한겨레 2006/02/09; 서울신문 2005/07/08; 서울신문 2005/06/20; 경향신문 2003/12/21), 그리고 ‘추한 한국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자는 논의에서 등장했다(서울신문 2006/04/05; 세계일보 2006/04/05; 문화일보 2006/04/05). 게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생하는 행위들을 지적하며 외국 업체들이 한국인들을 이른바 진상 손님과 블랙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는 기사(국민일보 2014/12/02; 국민일보 2000/07/31), “나체수영”, “해외 원정 성매매”, 영화 <어벤저스2>를 촬영 중이던 마포대교 인근의 “사물놀이 소음 발생” 등의 행위들 역시 이른바 외국인이 등장하는 장소에서 벌어졌을 때마다 ‘어글리 코리아’의 것으로 서술되었다(국민일보 2016/03/15; 동아일보 2015/08/20; 국민일보 2014/03/30).

어떤 행위가 ‘어글리 코리아’의 행위인가는 시기나 글의 맥락에 따라 달라졌다. 때로는 이민이나 유학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도피성”의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출국 10일 만에 모국어상실증에 걸린 일간이” 역시 ‘어글리 코리아’로 명명되었다(경향신문 1971/11/06; 경향신문 1971/01/19; 경향신문 1991/06/20). 기존에 비판받지 않던 인물 역시 정치적 위치 변화에 따라 ‘어글리 코리아’로 분류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김형

옥의 경우 실종 이후, 전 세계 교민들의 생활을 조망하는 한 기사에서 “한때 정권의 핵심부에 있으면서 해외에 도피시켜둔 부정축재로 국제카지노 등에 도박 행각이나 벌이며 추태를 일삼는 김형옥 같은 어글리 코리언”으로 등장했으며, 미 의회에서의 증언 이후 “기회주의적”인 ‘어글리 코리언’이라 평가되기도 했다(동아일보 1979/11/29; 金大中 1977, 160).

‘어글리 코리언’ 서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범주 안에 있는 인물의 어떤 행위들을 ‘외국인’이라는 ‘타자’의 시선을 직접 인용하거나 가정하며 ‘민망한’ 혹은 ‘추한’ 것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글리 코리언’의 것으로 지적된 행위들은 이른바 나라 망신, 국가의 이름에 먹칠 하는 결과를 만든 계기로 설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1965년 당시의 활용 방식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어글리 코리언’이란 단어를 대중화시키는 계기가 된 수필집 『어글리 코리언』에 실린 수필 「어글리 코리언」에서 저자인 김진만은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코리언’들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자리나 남의 나라 백성과의 비교가 논의되는 자리에서는 거의 모든 한국인이 별안간에 징그러운 국수주의자나, 구제할 도리 없는 징고이스트로 돌변하는 습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악질적인 유형의 ‘어글리 코리언’이란 “허약하기는커녕 빈틈없는 계산과 평균수준을 벗어난 두뇌와 고양이와 같은 약빠른 눈초리를 지닌, 푹푹하기 이를 데 없는 신사들”이며,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호칭은 기회주의 자라는 것”이라 서술한다(김진만 1965, 68, 71-72).⁹⁾ 비슷한 시기 ‘어글리 코리언’ 시리즈를 연재했던 조선일보에서는 “남의 흠을 잡아 그 흠을 밀친

삼아 일 않고 밥을 벌려는 ‘어글리 코리언’은 보리밭 정사를 찾아 해매는 그 먼 옛날부터 ‘아베크’를 등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이 있어온 것”이라는 서술을 전개한다. 그리고 “한 회사의 세금포탈의 흠을 안다는 그 미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타는 취약한 사원 - 공금 유용한 교장의 흠을 미끼로 수월하게 부정입학을 시키는 취약한 학부형, 부동산 거래에 위조문서가 있었다는 흠으로 딸을 얻어 사는 취약한 사위 - ‘보리밭 지켜보는 일’이 떳떳한 직업” 등의 예시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면서 남의 흠을 잡아 직업 없이 금전을 뜯어내는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써 ‘어글리 코리언’을 활용한다(조선일보 1965/06/13).

이 시기의 ‘어글리 코리언’ 서술들에서는 ‘어글리’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으며 ‘못났다’, ‘추하다’는 번역 그대로의 의미를 활용했다. 그러나 ‘코리언’이라는 단어는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 경계 안의 인물들을 특정하기 보다는, 전반적 인간 범주를 아우르는 의미로 활용되었다.

‘어글리’는 이후 다른 문제 행위들을 지적하는 서술로 변주되었다. 그리고 ‘코리언’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힌 것은 월남 파병 및 기술자 파견이라는 ‘마주침’ 사건들과 결부되며 나타난 특정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거나, 망각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부터였다.

9) 영문과 교수였던 김진만(1926-2013)의 이 서적은 1966년 고려서림의 베스트셀러로 소개되었으며(경향신문 1966/06/01), 1972년 『어글리 코리언』으로 탐구당에서 재출판되었다. ‘어글리 코리언’이라는 제목은 1958년 미국에서 출간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레데러(Lederer)와 버딕(Burdick)의 소설 『어글리 아메리칸, the ugly American』에서 착안된 것으로 보인다.

4. 월남에 나타난 ‘어글리+코리안’

1) 첫 번째 봉인과 봉인 해제

베트남으로의 첫 파병이 이루어진 이듬해인 1965년 11월, 기술자 1군 11명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는 민간인 파견이라는 점에서 1964년부터 이뤄진 군대 파병과는 다른 성격으로 간주되었으며, 파견을 앞두고 그 선발 조건의 적합성,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 역시 지속적으로 기사화되었다. 신변이 확인된 자들의 조직화된 집단 이동인 파병과 달리, 민간인의 파견을 두고 ‘과연 적합한 인물인가’라는 자격을 두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동아일보 1965/11/12; 1966/01/25).

그러나 한국의 상품 수출 규모를 결정짓는 이른바 ‘바이 코리안’ 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미국과 국군 월남 증파 조건을 협상하던 시기이자 마지막 4차 월남 파병이 이루어진 1966년까지 이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동아일보 1966/02/01; 1966/07/16; 매일경제 1966/05/02; 임영태 2013, 148-151). 오히려 “체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좋고 또한 부지런한 한국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월남인의 감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으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평이 없었다”는 등 한국인 기술자들의 우수성, 우월성을 칭송하는 방식이 더 익숙하게 나타났다. “우리의 상품이 수출되는 나라는 현재 60여개국”, “대체로 호평 받아” 등의 서술과 함께 이른바 “메이드인 코리어” 상품이 ‘뵈’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품질을 더 관리하여 “코리어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도

록” 하자는 논지의 기사들 역시 자주 눈에 띄었다(동아일보 1966/09/10: 경향신문 1966/08/15). 이 시기 베트남 파병과 회사들의 진출, 그리고 기술자와 대학생, 연예인, 정치인, 예술인 ‘위문단’ 파견은 “자유세계의 대공방위 전선을 정비 강화하고 자유에 봉사하며 평화에 기여하는 영예로운 일”이 되어야만 했다(「월남파병에 즈음한 담화문」(박정희 1965/01/26): 윤충로 2013, 265, 267-268에서 재인용).

할슈타인 원칙의 사실상 붕괴, 수교국 확대 등의 외교 강화를 추진하던 1960년대의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1966년은, 다음 해 5월 치러질 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박정희 정권의 능력 역시 검증되어야 했던 해였다(동아일보 1966/07/16: 경향신문 1966/09/27).¹⁰⁾ 그러나 상황은 유리하지 않았다. 베트남 참전을 둘러싼 각국의 외교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되는 동시에, 미군 측의 피해와 ‘월맹군과 베트콩 소탕’에 관한 내용만 보도되었던 파병 초기와 달리 사상자 소식과(동아일보 1966/02/28) 월남전 반대 데모 소식 역시 종종 한국에 전달되었다(경향신문 1966/03/28: 1966/03/31). 대선을 앞둔 1967년 초에는 베트남 파병 사상자들과 가족들을 조망하며 “월남파병”이 “한국만이 유일한 땅이 아니며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히 일

10) 1953년 휴전 이후 1960년까지 한국은 반공노선,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와는 수교를 맺지 않겠다고 선언한 서독의 할슈타인 원칙을 준수하며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만 주력, 16개 국가와 수교를 맺었다. 그리고 1960년대 “중·소 대립의 심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중립국과의 외교 강화를 적극 추진, 대외관계를 신장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1971년 한국의 수교국은 1960년 16개국에서 5배에 이르는 83개국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기 북한은 반제, 반식민 해방을 내세우며 1966년 8월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선언, 다변외교에 치중하여 총 25개국과 수교를 맺었다(통일부북한정보포탈: 외교활동 - 수교현황: 동아일보 1966/07/05).

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월남이라도 가지 않고는 살길이 없는 ‘오늘의 현실, 민생고’를 보여주는 것으로 민심의 흐름을 판가름하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기사들까지 등장했다. 특히 인구대비 파병 인구가 많았던 농촌 지역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기사와 월남에서 남편을 잃은 한 ‘미망인’이 “아이 이름을 ‘맹호’로 짓는 등 곳곳하고 씩씩하게 키우며 잘 살아가고자 했지만, 결국 피로와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고 아이들은 “천애의 고아”가 되었다는 기사 등에서 이 비극적 서사는 더욱 강조되었다(동아일보 1967/01/12; 1967/03/24; 1967/03/25).

이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외국과 외국인의 존재, 수출과 외화벌이를 통한 경제 발전 의제들이 강하게 부각되었다.¹¹⁾ 상품과 인적 자원의 판매를 통해 실적을 내어야 했던 이 분위기 속에서 소위 국가 브랜드를 해칠 수도 있는 ‘어글리’와 ‘코리안’의 연결고리가 상상되기 힘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스베켄디크 2016, 376-380).

1967년 5월,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된 뒤 이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었다. 반공법 위반 혐의를 명목으로 한 기자 연행과 테러가 극심해진 시기를 거치고 난 뒤(송건호 외 2012, 269-280),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갑작스럽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1967년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동아일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연재된 ‘코리안 기생족 1~4’와 ‘취악한 한국인’ 기사들을 잠시 살펴보자.

11) ‘수출’이라는 키워드의 기사는 1965년 1,791건에서 1966년 11,825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66년, 동아일보는 37회에 걸쳐 “코리안의 고동 세계로 향하는 한국, 한국인, 한국상품”을 연재했다.

‘맥심’에서 고급 양식을 먹고 우아한 생활을 즐기는 한국인이나, 고성 방가로 골목을 휩쓰는 한국인이나, 모두 월남 사람들의 눈총의 대상임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월남 사람들에게서 떠 있는 어글리 코리안들이다(동아일보 1967/09/25).

‘사이곤’의 일류나이트클럽에는 어여쁜 풍가이들을 데리고 돈을 뿌리는 일부 기술자들도 적지 않다. 이래서인지 ‘사이곤’의 한국인간에는 “파월기술자들은 여자 낚는(?)기술도 좋다”는 명예롭지 못한 찬사가 유행하고 있다. (...) 우리 기술자들의 성실성과 능력은 월남 뿐 아니라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기술자들로 인해 상처 입은 월남 여성의 한국 남성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칠 것은 뻔하며 월남 여성의 경솔도 원인이겠지만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깬 월남 남성들의 증오가 불타오를 것도 사실이다(동아일보 1967/10/14).

이밖에 오토바이에 미치는 월남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일삼는 ‘어글리 코리안’들도 더러 있다. (...) 이들 몇몇 사기한들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사이곤’ 시민들의 불신감은 모르는 사이 점점 깊어가고 일는 것이다(동아일보 1967/10/17).

‘사이곤’ 거리를 마치 서울의 어느 술집 골목으로 착각하고 있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일류 나이트 클럽, 바를 가나 한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음식점에 가도 ‘코리안’의 추한 면을 스스로 들춰내는 ‘코리안’들이 너무 많다. (...) 손님으로 온 한 파월기술자 풍의 신사(?)가 음식을 날라온 예

쁘장한 월남 소녀의 손목을 덩싹 잡는가 했더니 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외국인들을 포함한 손님들이 마구 밀려들고 있는 점심시간이었다(동아일보 1967/10/19).

“유혹을 즐기며 과소비를 하는 모습”, “성실성의 부족과 근무 태만”, 고성방가, 외도, 사기, 살인, 과소비, 밀수 등이 ‘어글리 코리안’의 행위들로 조망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행위들이 1967년부터 갑자기 발생한 일들이 결코 아니었을 것임에도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과 함께 갑작스럽게 문제적 행위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¹²⁾ 누군가가 월남에 투영되던 경제발전, 외화획득의 희망과 월남에 간 사람들에게 투영되던 모범과 애국의 아우라가 더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라기라도 한 것인가?¹³⁾

지금부터는 이 갑작스러운 ‘어글리 코리안’ 기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
- 12) ‘월남’, ‘베트남’과 문제로 지적된 행위들 ‘유혹’, ‘외도’, ‘고성방가’ 등을 함께 검색한 결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이전 기사는 없었다. 이 행위들은 ‘어글리 코리안’ 단어와 함께 최초로 기사화되었다.
 - 13) 위의 시리즈를 처음으로 기사화한 이연교 기자는 『사상계』에서 수여하는 독립문화상 중 월남언론상을 받았다(경향신문 1968/04/03; 동아일보 1968/04/03). 동아일보는 1988년 이연교 기자의 부고에서 “한국군과 월남기술자들이 쌓아놓은 명성을 더럽히는 일부 취약한 한국인들의 추악상을 취재”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고 서술한다(동아일보 1988/05/23). 이상록 등은 당시 『사상계』를 주도했던 장준하, 함석헌 등이 박정희 정권에 취한 태도는 때에 따라 서로 달랐지만, 민족의식 고취와 근대화를 통해 서구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계몽 담론의 측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이것이 박정희가 제시했던 시대의식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고 보며,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런 측면이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한다(이상록 2007, 220, 224-230; 권보드래·천정환 2012, 368-369). 첫 기사화가 베트남 진출의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이 결국 정부의 이해와 일치된 측면을 이해해 볼 수 있다.

행위들을 문제시했는가에 집중해보며, 그 유포와 서술 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맥락들을 짚어보자.

2) 시선: 지켜보는 눈

이른바 ‘어글리 코리안’의 행위들을 두고 이 행위가 문제적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언제나 ‘외부인’의 시선과 판단이었다. “월남 사람들의 눈총”, “월남 사람들에게서 떠 있는 어글리 코리안”, “월남통신의 ‘고’ 국장 대리의 말”(동아일보 1967/09/25), “한국인에 대한 ‘사이곤’ 시민들의 불신감”(동아일보 1967/10/17), “상처 입은 월남 여성의 한국 남성에 대한 원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깎인 월남 남성들의 증오”(동아일보 1967/10/14), “외국인들을 포함한 손님들이 마구 밀려들고 있는 점심시간”(동아일보 1967/10/19), “월남국민의 눈”(동아일보 1967/11/06), “요즘 사이곤에서 발간되는 베트남 신문들”(이석열 1968, 145-146) 등 ‘외부’의 존재에 대한 서술은 항상 등장했다. 외신지, 외국인, 월남국민, 현지 보도에 대한 서술은 사실 추상적인 ‘타자’를 상상하여 묘사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 행위들을 목격하는 외부의 시선이 있다는 것과 이 행위들에 대한 평가가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 이 시선에 대한 서술은 앞에 언급되었던 긍정적 ‘코리아’의 상을 인준받고자 했던 시도들과 맞닿는 지점으로 읽히는 동시에, 이 시기 발생했던 사건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사건은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중앙정보부가 일곱 차례

에 걸쳐 발표한 ‘동백림 간첩단 사건(이하 동백림사건)’이다. 1967년 8월 슈피겔지는 보도를 통해 서독 베를린 에서 발생한 유학생 등의 납치/실종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재차 부탁하는 김형욱에게 계속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그리고 “강력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통한 사형 선고의 위험성”, “납치 여부” 등을 조망하며, 한국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국가”로 서술한다(Hentschel 1967, 23-28). 1967년 12월 10회 공판 자리에는 서독정부 대표가 방청했는데, 그는 재판과정을 일일이 메모하고, 슈피겔지를 펴놓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들과 동일한 인물인지를 대조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경향신문 1967/12/04; 동아일보 1967/12/04). 불과 몇 달 전인 3월, 경제 협력 및 차관 등을 협상한 서독 뉘브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외교적 성과로 열정적으로 선전했던 정부로서는, 이 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경향신문 1967/03/06).

두 번째 배경은 베트남 전쟁 파병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점점 더 높아졌다는 것이었다. 1967년은 베트남 전쟁 반대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날로 커지며, 유엔에서 미국의 입지 역시 좁아진 해였다(경향신문 1967/04/15; 1967/10/04; 동아일보 1967/09/18). 베트남 내의 여론도 유리하지 않았다. 1967년 11월 14일 사이공에서 열린 호주와 한국의 축구 경기에서는 한국 팀 응원단에게 빈 맥주 통과 바나나 껍질 등 남은 음식 찌꺼기와 돌을 던지며 야유하고 한국군 지프차들의 타이어 바람을 빼놓는 사건도 발생했다. 관련 기사는 이 사건의 원인을 일단 “‘베트콩’ 심리 작전대의 공작”, “월남 사람의 철저한 제노포비아와 질투심”으로 해석했으나, 기사 말미에서 결국 “친구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반성할 필요”,

“국민 각자가 그 처신을 반성해볼 일”이라는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이 사건 뒤 사령관 채명신 중장은 “월남에 와 있는 민간인들의 파렴치 행위에 대한 대책과 조처를 본국 정부에서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1. 주월 한국 민간인 파렴치범 강제 송환 2. 월남에서 해고된 기술자 즉각 소환 3. 한월협회 등을 통한 문화사업 활동 강화”를 건의하기도 했다(윤충로 2013, 269-270; 동아일보 1967/11/21; 1967/12/05; 1967/12/08). 이석열 역시 『세대』에서 “사이공에서 발간되는 베트남 신문”의 입을 빌려 “한국인 기술자들이 엉터리이고 베트남 여인들을 강간할 뿐 아니라 태권으로 마구 사람을 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러한 한국인 기술자들을 당장 추방하라”고 주장한다(이석열 1968, 145-146).

임영태는 ‘동백림사건’이 베트남 파병과 더불어 한국이 국제 사회에 등장하면서, 서방 세계를 놀라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서술한다(임영태 2013, 169-170). 그러나 이것이 실제 평가 기준을 만들어낸 기원이 맞는지, 이 일상적 외부의 평가들이 실제로 한국의 외교 관계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기사에서 서술된 문제의 원인과 심각성이 사실이었는가가 그 효과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럴 것이라는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평가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실제 사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 어떤 확실성”이 만들어지기에는 충분했다(마수미 2010, 101). 그리고 이 평가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확실성은 일탈 행위들에 대한 자기 검열의 기제를 만드는 동시에 도달해야 할 규범의 기준이 외부에서 결정된다는 의식을 만들어갔다.

3) 구별: 어글리 하지 않은 다수의 ‘코리안’과 일부 ‘어글리 코리안’

기사에서 지적되는 ‘어글리 코리안’의 일탈 행위들은 ‘일부 한국인’의 행위로 계속해서 강조된다. 그리고 일부의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수의 한국인이라는 대비되는 상에 대한 칭송 역시 이어진다. ‘어글리 코리안’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들에서 다뤄진 이 대립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 1〉 어글리하지 않은 다수 ‘코리안’ - 일부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서술 비교

출처	어글리하지 않은 다수 ‘코리안’	일부 ‘어글리 코리안’
동아일보 1967/09/25.	“대체로 송금 성적은 좋다”	“몇몇 사기한들”
동아일보 1967/10/14.	“우리 기술자들의 성실성과 능력은 월남 뿐 아니라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높은 평가”	“일부 몰지각한 기술자들”, “일부 기술자들의 외도”
동아일보 1967/10/19.	“땀 흘려 번 돈”	“비록 숫자는 적지만”, “코리안’의 추한 면을 스스로 들춰내는 ‘코리안’들”,
동아일보 1967/10/24.	“4만 7천 명의 국군 장병을 비롯하여 1만 천여 명을 헤아리는 파월기술자들이 우방에 빛나는 ‘코리아’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나날이 피와 땀을 흘리고”	“이러한 피땀의 노력을 또 한편에서 짓밟고 파괴하는 것이다 다름없는 소수의 부도덕배, 부랑배들”, “조국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동아일보 1967/12/05.	“모두가 건설”, “월남주재 한국인 대부분이 조국의 위치를 심사숙고하여 훌륭한 우방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을 것”, “또한 우리의 훌륭한 외교사절로서 임하고 있을 것”	“얼마간의 어글리 코리안”
경향신문 1967/12/11.	“월남에서 귀중한 목숨 바쳐 쌓은 국군의 앞찬 보람”	“몇몇 민간인의 탈선”, “몇몇 지각 없는 한국인들”
이석열 (1968, 145-146)	“2만 명의 기술자가 다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은 아니다.”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려 놓기 때문”

‘소수’의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강조는 “서울서 날고 기던 사기꾼 없어졌다 하면, 월남 온 줄 알라”(동아일보 1967/09/25), “서울에서 자취를 감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자들은 모두 월남에 집결”(동아일보 1967/10/17), “행방불명된 명동의 사기환을 찾으려면 ‘사이곤’으로 가시오”(경향신문 1967/12/09) 등의 서사로 이어졌다. 특정한 위반행위자들을 월남에 가기 전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그려내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는 식의 이 서사 방식은 이후 등장한 소설과 음악 등 다른 장르에서 역시 다시 확인해볼 수 있다.

“헌데, 그 총각이 그래도 돈은 좀 벌어들였다면서요.”

“돈을 벌어와? 건달 깡패 노릇하다가 월남 가서 돈푼이나 만져봤다니까 신통해서 하는 소리지 뭐 큰돈 벌어서 하는 애긴 줄 알아?”

“그 총각이 깡패였어요?”

“왜 김추자 노래에도 있잖아. 말썽 많은 김상사 월남에서 용사 뺏다고”

(은희경 1995, 53-55)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

말썽 많은 김총각 모두 말을 했지만 의젓하게 훈장 달고 돌아온 김상사

(신중현 1969,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 노래: 김추자)

어글리 하지 않은 다수의 ‘코리안’을 칭송하는 방식에서는 ‘땀 흘리며 목숨 바쳐 성실하게 번 돈’을 착실하게 송금하고, 조국의 위치를 심사숙

고하며 월남뿐 아니라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외교사절로 임하라는 당시 요구되었던 규범이 읽힌다. 또한, “‘취약한 한국인’이 있다면 그 말은 실상 3천만 국민의 30만 분의 1 정도”라는 등의 서술로 ‘어글리 코리안’들이 수적으로 적은 일부임을 강조하는 방식에서는, 코리안 혹은 한국인을 마치 어떤 고유의 긍정적인 속성을 가진 집단인 것처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읽힌다. 이것은 당시 한국의 조직적 이주의 목표가 ‘인력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신용, 국가 이미지, 체면, 좋은 평가, ‘따이한’의 체통’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며, 코리안의 이미지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있다는 확실성을 한 번 더 강화한다(경향신문 1967/12/09; 1967/12/11; 동아일보 1967/10/10). 또한 ‘소수’의 특정한 어글리 코리안을 규정하고, 이와 대비되는 모범적인 ‘다수’의 코리안이 있음을 끊임없이 주시시키는 이 방식은 우선 ‘마주침’ 과정에서 등장한 문제적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이 실패한 정부의 외교 정책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글리 코리안’이라 지칭되는 특정한 한국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소수의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가상의 대상과 이루어지는 이 비교와 거부 과정은 다수의 코리안이라는 상상된 이미지를 통해 ‘코리안’이라는 집단의 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를 규정하고 믿으며 내면화하는 과정이 되었다(드 세르토 2013, 177). 이 과정은 ‘어글리 코리안’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속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었으며, 결국 같은 집단이라고 상정되는 곳에 속한 누군가의 행위들을 서로 단속하고 배척하며 감시하는 기

능을 발휘 집단 내의 이탈자를 구별해내는 방식으로도 연결되었다. 지켜 보는 눈을 통해 만들어지는 규범과 집단의 경계는 다시 경계 지어진 집단 내에서 '서로/바라보는 눈'으로 귀결되었다.

4) 문제가 된 '정체불명'과 관리체계의 등장

갈등의 원인을 일부의 사람들의 문제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로 부각된 것은 '정체불명'이었다. “정체 모를 한국 여자”, “정체불명의 한국인”, “정체불명의 가면”, “정체불명의 기생족”, “‘무작정 방월’ 쇼단” 등 “얼마나 배회하고 있는지 역시 알 도리가 없는” 이 존재들은 동시에 필연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문제적 존재로 그려졌다(동아일보 1967/09/25; 1967/10/10; 1967/10/24).

‘사이곤’에는 정체모를 한국여자들이 술하게 많다. 한국레스토랑인 ‘코리아나’에는 매일 밤 늙은 미국인과 팔장을 끼고 저녁을 먹으러오는 젊은 한국여성들이 손님들의 눈길을 모은다. 누구나 그녀들이 미국인과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월남에 왔는지 직업이 뭔지 그녀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이러한 ‘정체불명의 한국인’이 ‘사이곤’에 얼마나 배회하고 있는지도 역시 알도리가 없다(동아일보 1967/10/10).

베트남에서의 충돌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1967년 11월 이후, 박정희는 “요즘 빈번히 전해지고 있는 월남 속의 한국인 행패에 대해 이를 철저히 가릴 것”을 명령한다. “취약한 한국인들을 죽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따져보겠다”, “파렴치한들은 모조리 현지 징용을 해서 노동형에 처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발언 역시 전달된다(경향신문 1967/12/09). 다소 격앙된 반응으로만 보이던 이 발화들은 1968년 어떤 실질적 제도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조로 전개되어간다. ‘인력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문제의 원인을 덮기 위해 일부의 ‘어글리 코리안’만을 부각시켰던 서술 방식이 이제는 체계적인 식별 관리 방식의 제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이다.

“외화 획득에 공이 큰 연예인들” 역시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무절제한 공연”을 하는 존재로 그려지며, “해외에 나가기 위해 쇼단이 공연 내용을 국내와 달리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본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 “공보부와 외무부의 해외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펼쳐진다. 이어 공보부가 “공연 허가지를 이탈치 않도록 외무부에 그 조치를 의뢰”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에서도 외국 진출 연예단 선정, 특히 오디손 심사를 경험과 권위를 가진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소개된다(동아일보 1968/03/26). “애초 선발 과정에서 잘못된 인텔리 광부들 때문”에 “건장하게 일하는 광부들과는 달리 병약하고 피를 부글는 일부 광부들”이 있으며, “돈에 팔려 조국을 배반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적화공작단 사건’ 때에는 혹시 광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초조”

했다는 얘기도 소개된다(경향신문 1968/04/13). “거의 이방인처럼 서로 만나도 모른 채하며 ‘행동 통일’이 어려웠던” 월남 교민 단체인 한민회의 결정은 “흐뭇한” 소식이 되며(동아일보 1968/08/13), 문공부는 “해외 연예단의 공연 실적을 매월 1회씩 보고토록 하여 실적이 없거나 국위를 손상시키는 단체에는 가차 없이 소환”하는 이른바 “‘어글리 코리언’ 제거 방안”을 입법조치하기로 한다(경향신문 1969/05/03). 이어 도쿄에서 열리는 「엑스포70」 만국박람회를 앞두고 ‘어글리 코리언’이 아닌 ‘세련된 코리언’을 만들 “모범적 매너를 가르치는 영화”를 기획하고, 선전 책자와 민요·국악 등의 레코드 음반, 국보급 문화재 모조품, 명소 소개 슬라이드 등을 반드시 휴대시키기로 하는 지침 역시 마련된다(경향신문 1970/02/06; 1970/03/02).

‘알 수 없는 것’은 어떻게 접근해 올지 모르는 ‘위험한 것’이 되며 ‘아는 것’은 ‘안전한 것’이 된다. 과거의 예시들은 ‘알 만큼 알 법한 인텔리층’ 역시 보이지 않는 마수에서 안전하지 않은 존재로 규정한다. ‘정체불명’의 존재들이 매우 유혹적이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어디로 이탈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들로 부각되면서 이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 역시 설파되었다.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과거를 알 길이 없는 정체불명의 ‘어글리 코리언’들의 살인, 공문서위조, 폭행, 계약 위반, 무허가 식당 경영 등 범죄 사실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소식 혹은 수십여 명의 범법 민간인들을 체포했다는 사실 역시 계속해서 공표된다(경향신문 1968/01/09; 조선일보 1968/01/09; 매일경제 1969/04/29; 국립영화제작소 1970).

이탈 여부와 공연 내용, 인텔리 등 문제적이라고 제시되는 것들에 대해 등록과 사전심사, 실적 보고 및 평가 등 전반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주장들은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 1972년 10월 유신 개헌과 계엄령 선포 등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뤄진 것이었다. 1971년 4월, 대선 3선 도전을 앞둔 박정희 정부는 1968년, “인구관리에서의 큰 전환점”을 마련한다. 김신조에 의한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으로 알려진 1·21 사태를 비롯한 남북관계의 긴장을 근거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등의 “전 국민 감시체계”를 일상화한다. 이른바 준전시와 같은 상황임을 주지시키는 ‘피포위 의식’을 조성하는 등 국가안보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것 역시 강조되었다. 1970년대에 걸쳐 영화법, 공연법, 검열 등의 사회적, 정치적 조치들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스스로를 위협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합리화되었다(문 1997, 183-184; 전지니 2014, 154; 김대현 2017, 118; 이타가키 2015, 593-595; 홍성태 2012, 96-101).

공식화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흔적과 결과는 1970년대 중반, 중동으로의 기술자 진출을 앞두고 등장한 ‘어글리 코리안’ 기사에서 역시 확인된다.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는 정신교육이 보다 철저해야” 하며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오명이 다시는 여러 나라에서 나돌지 않도록 당국의 각별한 지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경향신문 1975/11/29; 매일경제 1975/12/05). 어떤 문제적 사건이 발생한 후가 아니었음에도 이미 이주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전 관리는 낯설지 않은 것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5. ‘어글리 코리아’이 만들어낸 또 다른 법석

‘어글리 코리아’의 활용을 통해 그려진 마법의 원은 1988년을 전후로 두 가지 양가적인 속성을 가진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한 사건은 ‘어글리 코리아’를 망각시키고자 했던 1988년 서울올림픽이며, 또 다른 사건은 ‘어글리 코리아’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의 전면 시행이었다.

1) 두 번째 봉인과 1988 서울올림픽

등장 이후 꾸준히 발견되었던 ‘어글리 코리아’이라는 단어는 1987년~1988년 동안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특히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대비할 단속의 필요성을 설파하기 위한 기사 외에 이 기간 동안 88 서울올림픽과 관련하여 해당 단어를 언급한 기사는 전무했다. 그리고 한국과 한국인을 지칭하는 방법으로는 ‘동방예의지국의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 ‘자긍심’, ‘국제인’, ‘예절 있고 의연한 한국인’ 등의 단어들 사용되었다(매일경제 1987/07/27; 1988/01/09; 경향신문 1988/08/17).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들을 집중적으로 유포하기 위한 서사였다. ‘추한 한국인’, ‘못난 한국인’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어글리 코리아’이라는 단어는 잠시 실종되었다.

단어 실종 사건 이전까지 ‘어글리 코리아’를 다룬 기사들을 살펴보자. 1981년 10월, 서울올림픽의 유치가 확정된 후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는 논조의 서술이 자주 다뤄지기 시작하며, 여기서 올림픽은 “문화 한국”을 평가받을 심판대”이자, “선진국들보다 두 배 세 배의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일이므로, 7년 뒤의 올림픽을 앞둔 “전 국민은 민간외교 담당자”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어글리 코리아”를 뿌리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동아일보 1981/10/02; 경향신문 1981/10/03; 경향신문 1982/02/24).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지만 몇 안 되는 미꾸라지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의 바다를 온통 흐린 풀이다.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급증할 것이다. 그 전에 ‘어글리 코리아’를 뿌리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경향신문 1982/02/24).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 검사장에서의 일이다 ‘노 스모킹’ 표지판을 비웃는 듯 유독 담배를 피우는 여행자들은 일부 ‘용감한 어글리 코리아’들. 김포국제공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 ‘질서는 아직 멀었군’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른다. 외국 여행자들 보기가 민망스럽다. (...) 88년은 미래가 아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총알 같이 다가온다(경향신문 1984/10/20).

‘지켜보는 눈’의 존재는 이제 ‘전 세계’로 확장되어 상상되었다. 올림픽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는 ‘선진국’, ‘문화 한국’ 등 전 세계에 한국의 높아진 국가적 위상을 과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결속과 단합’, ‘질서’, ‘관직 없는 사절’,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자세, ‘합리

적 태도'와 '하면 된다'는 '캔 두 스피릿' 등의 규범 역시 요구되었다(경향신문 1983/03/04; 1984/10/20; 1986/01/01; 매일경제 1984/02/15; 1987/07/27; 1988/01/09; 박해남 2016, 365-378). “평화적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1987년 4.13 호헌조치는 올림픽을 ‘안정과 화합’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한다.

올림픽은 또한 북한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기회이자, 내부 질서를 확립해야 할 이유로 북한을 내세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19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일어난 김포공항 폭발 사건은 곧바로 북한 테러리스트의 소행으로 주장되었으며, 대학 안 경찰 진입 조치와 5개 대학 폐쇄 근거가 되기도 했다(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67-72; 경향신문 1986/09/16). 유혜진과 천혜정은 “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표어인 ‘나에게는 보람, 조국에는 영광’에서 국가와 국민의 일체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88 서울올림픽이 “국민에게 올림픽을 개최한 국민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며, 시민을 공적 주체인 국민으로 호명하는 하나의 의례로 기능”했다고 설명한다(유혜진·천혜정 2014, 163, 171).

그러나 이 ‘어글리 코리아’의 실종에 단지 정부의 이해만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역시 민주적 ‘국민’과 민주화된 ‘조국’의 서사는 강조되었다. 그리고 이는 6월 항쟁을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이뤄낸 성과이자, “성숙한 한국인의 모습”과 “민주화의 쾌거”를 전 세계에 드러낸 것으로, 한국을 민주화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과는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동아일보 1987/07/01; 1987/07/02; 성명

서 1987: 결의문 1987: 매일경제 1988/01/01). 민주화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한 ‘선진국’에 대한 열망이 1980년대 말 ‘새로운 한국’으로의 ‘도약’을 상상하며 ‘단결’ 또는 ‘단합’하는 것으로 모아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시점에서 더 과거에 있었던 마주침 사건들은 우수한 ‘국민성’을 칭송하기 위한 단일 서사로 기억되었다. 1970년대 중동에서 외화를 벌어들인 것은 “우리의 근면성이 그들을 감동”시켰고, “우리 근로자들이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성실한 국민적 심성’은 중동의 사막이나 동남아의 정글 속으로 남보다 한발 앞서 진출하게 되고 그곳에다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게 된 원동력”이었다고 평해진다(경향신문 1983/03/04). 성실했던 과거의 이주자들에 대한 기억의 소환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국민성’의 저력이 ‘태초에 존재했던 고유의 것’임을 강조하는 이 서사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모두에게 ‘선진국’의 위상을 인정받고자 하는 현재의 훈련과 노력이 도달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올림픽 개막식이 끝난 뒤 ‘우리의 저력’에 대한 찬사를 보내는 기사에서 올림픽이 만들어낸 대표적 환상의 서사를 살펴보자.

스스로 놀랍고도 대견스럽다. 연일 분출하던 노사분규와 그렇게 극심하던 학생 시위, 백가쟁명의 정치논쟁이 하루아침에 잠잠해지고 국민적 역량과 염원이 일거에 올림픽에 집결됐다. 각급 식당과 각종 행사 및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청결과 질서, 협력과 양보의 모습이 올림픽개최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를 절로 느끼게 한다. 무슨 일이든 국가적 국민적 큰 힘이 필요할 때면 모든 것 제치고 결집하는 우리의 저력이 새롭게 자랑스럽기 그지없다(매일경제 1988/09/19).

모범적인 ‘코리안’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과거 그곳에 있었던 ‘어글리 코리안’들의 이야기는 결코 현재로 소환되지 않았다.¹⁴⁾ ‘어글리 코리안’의 형상은 늘 현재의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기에 그리고 도약을 위한 기억 속에서 ‘코리안’의 과거는 ‘어글리’하면 안 되는 것이기에, ‘어글리 코리안’은 언제나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에만 존재한다.

2) ‘어글리 코리안’ 단어의 부활: 해외여행 자유화와 일상적 ‘타자’ 구별

서울올림픽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다시 활용되었다.¹⁵⁾ 이 부활은

14) 칸슈타이너는 “과거의 사건들은 만약 ‘그들이 최근의 이해관계가 만든 프레임에 적합할 때만’이라는 집단적 세팅 안에서만 재소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Kansteiner 2002, 188).

15) 해외여행 자유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그 허가 연령을 50세, 45세, 35세, 30세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988년 7월 1일부터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아졌으며, 1989년 1월 1일부터 연령제한이 완전히 철폐되었다. 1981년에는 해외여행의 경우 방문 초청이 3등친 이내로 제한되었고, 50세 이상의 부부가 함께 해외여행에 나서야만 했었다. 해외 유학의 경우 대학 2년을 수료하고 병역을 필해야 했으며, 국사, 국민윤리, 외국에 과목에 대한 유학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 자유화 조치로 9월 1백 26개였던 해외여행(아웃바운드)전담 여행사는 1988년 11월 10일 기준, 3백 41개로 2.7배 증가했다(김동식 2014, 412-414; 매일경제 1988/11/10).

‘전면개방’의 부담, ‘정체파악’ 상의 어려움을 이른바 ‘불건전’한 여행의 방식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등장한 단어, ‘어글리 코리안’이 지칭하는 행위들은 질서의식 부족, 쇼핑 관광, 섹스관광, 보신 관광, 화투, 과소비 등이었다. “호텔 안에서 왈자지껄 떠들고, 잠옷 바람으로 복도를 거닐고, 예사로 침을 뱉는 등 최소한의 공중도덕도 안 지키는가 하면, 동남아에서는 퇴폐, 향락업소의 손님 중 과반이 한국인”,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뺨, 자라, 곰 등 정력에 좋다면 혐오식품이라도 닥치는 대로 즐겨 찾아 먹어” 등 행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이어진다. “본사가 해외특파원을 동원해 추적, 조사한 ‘어글리 코리안’의 실체를 보면 올림픽을 주최한 국민이라 하기엔 너무도 창피한 일들이 한국 단체 관광객이 가는 곳마다 속출”한다는 이 진단은 “이런 실수와 추태들이 쌓여 한국인들은 모두가 비문화인, 반문명인, 부도덕한 국민 등등으로 지구촌에서 소문이 날 염려가 없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매일경제 1988/07/09; 1988/11/10; 경향신문 1989/02/14).

1988년 나온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국민의 건전여행 유도대책」은 향후 전망과 함께 “낭비, 위락이 아닌 국민의 식견을 높이는 건전한 해외여행” 지침을 제시한다. “여행자 소양 부족에 기인한 해외에서의 국위 실추”, “국민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여행광고”, “여행사의 무책임한 안내로 국외에서의 이탈하는 행위(안보)”가 우려된다며 ‘허위, 과장 광고’, ‘사찰 내에서의 누드사진 촬영물의’, ‘현지 업체와의 결탁을 통한 쇼핑 및 퇴폐업소 이용 강요’, ‘홍콩에서의 제삼국 경유 월복 시도 행위’ 등

을 예시로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써 ‘보안교육’, ‘여행
예절, 방문국에 대한 기초상식’, ‘기타소양교육’으로 구성된 “여행자소양
교육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통부 1988, 1-3).¹⁶⁾

그러나 심각하다고 말하는 이 서술 방식은 마치 한갓 해프닝을 묘사하
는 것처럼, 가십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읽히며 실상 별다른 심각성을 만
들어내지 못했다. ‘자유화’라면서 사전심사 혹은 교육을 통한 자유의 제
약을 추진하고자 했던 ‘소양교육’ 역시 결국 늘어나는 관광객의 숫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요식에 불과했기에 결국 1992년에 폐지된다.¹⁷⁾ 심지어
기사에서 등장하는 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 묘사들은 해당 여행지에서 할
수 있는 ‘관광’의 방식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다. 미국, 일
본, 프랑스 등 각국에서 일어난 ‘난해한 욕조 사용법’, ‘와인 만취’ 등의
해프닝을 우선 소개한 기사에는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수모”를 당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하자는 취지의 서술이 등장한다. 물가 싸고 가까
운 동남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과 “한국이 최근
부를 축적하면서 대부분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보다 못 산다는 등 앞잡아
보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교민의 말로 시작된 기사는 ‘제2의 섹스 애니

16) 이 지침에 따르면 보안교육 2시간, 소양교육 2시간의 교육이 진행되었었다. 보안교육은 ‘보안의 중요성’이 담긴 내용을 의미하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주도, 소양교육은 ‘민족 정신, 여행안내’의 내용을 의미하며 교육 기관에서 선정하는 전문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지침 이전 공용/상용/문화/관광 등 일반 여행자들의 교육은 남성의 경우 한국반공연맹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예지원에서 담당했으며, 선원은 해운항만청, 이민 및 해외취업자는 해외개발공사, 유학생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에서 담당했었다(교통부 1988, 2-3).

17) 국가기록원, ‘금기와 자율, 해외여행’, ‘해외여행 자유화’ 참고.

멀로 비칠 정도로 섹스관광 업소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서술한다. 이때 이 기사는 다른 해프닝들은 소양교육을 통해 해결될 수 있지만, 섹스관광에서 형성되는 ‘부정적 이미지는 쇠신하기 어렵다’고 우려하면서도, 라이브 쇼, 마사지 업소, 곰, 자라 등을 취급하는 뱀 집 참관 등의 여행상품을 소개한 뒤 “국제 매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굳이 특별한 목적을 가진 여행이라면 가능한 한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하라는” 여행사의 권고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경향신문 1989/02/13). 또 다른 기사는 방콕의 대표적 환락가와 그곳의 서비스를 나열하고(동아일보 1989/12/23), “‘해외 추태’ 낫 뜨겁다”는 사설에서는 “집에서 새는 쪽박 나가서도 샌다”며 비난을 하면서도 “여행의 해방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고 서술한다(경향신문 1989/02/14). 이른바 ‘선진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에서의 ‘어글리 코리아’는 ‘한국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예의범절과 해당 국가의 문화 등 기초소양을 익혀야 할 존재로 그려졌지만, 경제적 차이가 있는 국가에서의 ‘어글리 코리아’는 사실상 우쭐하며 유흥을 즐기는 자의 표상이 되어갔다.¹⁸⁾ 이 시기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된 “해외여행을 배웁시다”에서는 “우리는 해외 여행에 앞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한 다음, 여행길에 나서야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관광지 풍경들과 함께 비키

18)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글로벌 에티켓’과 예의범절에 대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이 책들이 전통적 예의범절과 ‘서구(서양, 유럽, 미국 등)’의 에티켓 두 축을 중심에 놓고 이를 조화롭게 익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박마리아 1955; 정충량 1964; 전혜영 1967; 전영우 1987; 이상현 1986; 이원복 1987; 김상철 2008).

니를 입은 여성과 흘러넘치는 여성을 화면 가득 보여준다(국립 영화제작소 1989).

해외여행 자유화를 통해 '세계'로 향한 이들은 이제 '타자'를 '바라보는 눈'을 얻은 것처럼 외부에서 쏟아지던 시선의 방향을 외부로 바꾸며, 낮 설고 이질적인 것을 찾아 관찰하며 감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누리기 시작했다. 해외여행 '자유화'는 시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자유화'가 아니라 그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바꾼 '자유화'가 되었다. 그리고 실종되었다가 부활한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빠져도 그만일 정도의 무게감을 갖게 되었다. 의식해야만 하는 것으로 주지되었던 '지켜보는 눈'의 무게는 그간 반복된 '어글리 코리안'의 유포를 통해 이제는 너무 '익숙한 것'이자, 올림픽을 통해 어느 정도 달성된 기준처럼 여겨졌다. '어글리 코리안'의 실종을 통해 만들어진 환상 속 '국제화, 세계화, 선진화' 시대 '새 코리안'의 행위들은 이제 '외부인'과의 서열 비교를 통해서만 때때로 '어글리'한 것이 되었다.

6. 맺으며

'어글리 코리안'은 실상 갑자기 등장하여, 실체가 없는 대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지칭하고자 했던 표현이었다. '어글리'한 행위들은 사실 건전함과 바람직한 행위들과 대비되는 그 '어떤' 행위로 묘사되었으며, '어떤 위반자'인 것인 양 묘사된 '어글리 코리안'은 지칭된 대상의 실체보다

이를 지칭하고자 시도하는 방식과 맥락에 그 의미와 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의 도입부에서 나는 ‘타자’에 대한 구별짓기의 방식에 - 특히 출신 국가에 기반을 둔 정체성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구별짓기 -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활용된 몇 가지 사건들을 조망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어글리 코리안’은 마치 어떤 ‘마주침 사건’의 결과로 나타난 것처럼 활용되었지만, 사실 어떤 사건을 ‘타자와의 마주침 사건’인 것처럼 간주하게하며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조처가 취해져야 할 ‘갈등’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고 있었다. 무엇이 건전한 것인지, 무엇이 국가적 위상이며, 무엇이 국가의 이미지이며 ‘코리안’이 무엇인지는 애초에 환영에 불과했기에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코리안’이 존재한다는 것은 타자, 즉 타자의 시선이나 위치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었으며, 요구(demand)와 욕망(desire)의 긴장 속에 사로잡힌 정체성 형성의 위치 자체는 분열의 공간에 불과했다(바바 2012, 111-113). 그러나 단어의 등장과 활용이 그려낸 마법의 원 안에서의 효과는 제법 확실했다.

누군가 나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는 상상된 시선은 자기 검열의 기제를 만드는 동시에 도달해야 할 규범의 기준이 ‘외부’에 있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일부’ 대 ‘다수’의 구별은 정치적 행위의 책임을 ‘일부’의 것으로 돌리는 것에서 출발, 규범과 집단을 연결 짓는 서사로, 집단의 경계 안에서 형성된 규범을 내면화하는 기제로, ‘일부’ 위반자들을 식별해내야 할 것 같은 당위를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이 식별의 과정은 ‘북한 괴뢰’라는 타자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피포위 의식’을 통해 어렵고

도 두려운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신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관리체계를 소환, 결국 국가적 관리 체계의 도입을 합리화하는 과정이 되었다.

이 ‘어글리 코리안’이 만들어낸 효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발휘되었다.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발생한 ‘어글리 코리안’ 단어 실종은 ‘어글리’에 방점을 찍었던 첫 활용과 정반대로 ‘어글리’를 망각시키고자 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 실종은 과거와 단절되어 ‘선진’과 ‘자유’, ‘민주’의 새 시대로 도약하는 것 같은 착각과 함께 새로운 ‘코리안’을 구획하는 재료가 되었다. “살아 있을 때 자신에 대한 반대의 깃발 아래 각양각색의 상충하는 이해집단을 결집시켰던 어글리 코리안은 실종 이후 “그들의 해산을 야기”했다. 그 대상자는 “바람에 날아가고”, “전염의 위험” 때문에 어글리 코리안의 흔적은 지워지며, “사건은 청소”되지만, “기억은 청소할 수 없었다”(드 세르토 2013, 301-302, 320; 필자 인용 및 각색). 장엄한 ‘어글리 코리안’의 대서사를 끝낼 기회는 적절한 ‘코리안’의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왔으며, 이는 거꾸로 말해 이 이름의 부여가 기억사의 새 국면을 열어준다는 것을 의미했다(Assmann 2006, 155; 필자 인용 및 각색). 결국 ‘어글리 코리안’의 활용을 통해 구성된 ‘코리안’은 역시 ‘어글리 코리안’에 대한 기억을 통해 형성된 범주와 서열의 질서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었다. 그리고 이 질서에 편입된 ‘코리안’은 이제 ‘타자’의 환영을 두고, 그 환영의 ‘어글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때로는 지켜보고 있다고, 때로는 보여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이것이 일부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고, 그리고 이 환영을 관리하기 위한 또 다른 질서들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수정~~

참고문헌

- 교통부. 1988. 「海外旅行 自由化에 따른 國民의 健全旅行 誘導對策」.
- 권보드래·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상상.
- 김금미. 2010. “대학생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 수용적 행동.”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5(2). 259—283.
- 김기봉. 2010. “역사의 거울에 비춰 본 한국인 정체성.” 『한국사학사학보』 21. 149-173.
- 金大中. 1977. “一派萬派 워싱턴의 코리아 뉴스.” 『관훈저널』 25호. 150-161.
- 김대현. 2017. “‘남자다움’의 안과 밖: 1950~1970년대 한국의 비규범적 성애·성별 실천과 남성성의 위치.” 『그런 남자는 없다』. 서울: 오월의봄, 104-125.
- 김동식. 2014. “세계의 장소론: 지구·대타자·여백으로서의 세계.” 『문학과사회』 27(1). 395-432.
- 김상철. 2008. 『글로벌교양과 리더십』.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순남. 2017. “‘한국인’ 정체성, 사회적 소속감.” 『젠더와 문화』 10(1). 153-189.
- 김영환 외. 2011. 「해외봉사단 국가브랜드 교육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국가브랜드위원회.
- 김원 외. 2011. 『한국의 다문화주의 - 가족, 교육 그리고 정책』. 서울: 이매진.
- 김진만. 1965. 『아글리 코리안』. 서울: 탐구당.
- 김현미 외. 2013. 『우리 모두 조금 낯선 사람들: 공존을 위한 다문화』. 파주: 오월의 봄.
- 김희강 외. 2016. 『한국 다문화주의 비판』. 서울: 도서출판 앨피.
- 남호엽·차보은. 2017. “한국 사회과에서 국민정체성과 글로벌리즘의 관계, 2009-2014.” 『글로벌교육연구』 9(1). 121-141.

- 드 세르토, 미셸. 2013. 『루딩의 마귀들림: 근대 초 악마 사건과 타자의 형상들』, 이충민 역. 파주: 문학동네.
- 마수미, 브라이언. 2010. “정동적 사실의 미래적 탄생: 위협의 정치적 존재론.” 『정동 이론』, 최성희 외 역. 96-122.
- 문, 캐서린. 2002. 『동맹 속의 섹스』. 이정주 역. 서울: 삼인.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 - 범정부 차원의 국가브랜드 제고 활동 본격화. 2009년 1월 21일 보도자료.
- 바바, 호미. 2012.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서울: 소명출판.
- 박마리아. 1955. 『女性和 教養』.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선웅·우현정. 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인 되기.” 『사회이론』. 44. 211-258.
- 박윤경. 2014. “다문화 시대 한국인 정체성의 의미: 서울 지역 초등학교생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73-103.
- 박해남. 2016. “1988 서울올림픽과 시선의 사회정치.” 『사회와 역사』 110. 353-389.
- 브라운, 웬디. 2010. 『관용 다문화제국의 새로운 통치전략』. 이승철 역. 서울: 갈무리.
- 손애리. 2015. “한국인의 국민정체성의 사회적 원천과 그 효과.” 『한국사회』 16(1), 101-133.
- 송건호 외. 2012.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개정증보판)』. 파주: 다섯수레.
- 스베켄디크, 다니엘 중. 2016. “세계 속의 동아시아 국가 브랜드 이미지.” 배항섭·박소현·박이진 편. 『동아시아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성균관대학교출판부. 376-414.
- 오경석 외. 2009.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파주: 한올아카데미.
- 유혜진·천혜정. 2014. “서울올림픽 기념관이 재현하는 서울올림픽 공식기억.” 『사회과학연구논총』 30(1). 151-183.

- 윤인진·황정미 편. 2014. 『한국 다문화주의의 성찰과 전망』. 서울: 아연출판부.
- 윤충로. 2013.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97. 251-285.
- 은희경. 1995. 『새의 선물』, 서울: 문학동네.
- 이봉범. 2011. “1960년대 검열체제와 민간검열기구.” 『대동문화연구』. 75. 413-478.
- 이상록. 2007.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 『사상계』, 『씨알의 소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진영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8. 215-251.
- 이상현. 1986. 『여성에티켓』. 서울: 레이디플라자.
- 이석열. 1968. “파월기술자들”, 세대사, 『세대』, 1월호. 144-149.
- 이원복. 1987. 『먼나라 이웃나라 1』, 서울: 고려원미디어.
- 이철우. 2003. “국적과 종족성에 의한 집단적 자아와 타자의 구별.” 『사회이론』 23. 13-47.
- 이타가키, 류타. 2015. “지문.”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579-618.
- 임영태. 2013. 『국민을 위한 권력은 없다: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 병영국가』. 파주: 유리창.
- 장인옥·김현아. 2014. “한국인 이민 1.5세대 청소년의 민족정체성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국학연구』 25(1). 59-84.
- 전영우. 1987. 『여성의 예절과 올바른 대화법』. 서울: 레이디플라자.
- 전지니. 2014. “반공과 검열, 그리고 불온한 육체의 기묘한 동거.” 『여성문학연구』 33. 147-189.
- 전혜영. 1967. 『여성 에티켓』. 서울: 구미서관.
- 정충량. 1964. 『여성과 에티켓』. 서울: 三中堂.

- 채백. 2014. “박정희 시대 신문 독자의 사회문화사.” 『언론정보연구』 51(2). 5-33.
- _____. 2015. 『한국 언론사』. 서울: 컬처북.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당신들의 축제, 88올림픽과 독재정권』. 서울: 민중사.
- 홍성태. 2012. “유신 독재와 주민등록제도.” 『역사비평』 99. 91-112.
- 황병기. 2014. “일상에서 읽는 한국인의 정체성.” 『국학연구』 24. 429-466.
- 황정미 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서울: 여성정책연구원.

- Anderson, Benedict. 2006. *Imagined Communities*. New York: Verso.
- Assmann, Aleida. 2006. *Der lange Schatten der Vergangenheit - Erinnerungskultur und Geschichtspolitik*. München: C.H.Beck.
- Duus, Peter. 1998. “Defining the Koreans.”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397-423.
- Hentschel, Manfred. 1967. Affäre, Koreaner - Lage des K. *Der Spiegel*. 36. 23-28.
- Kansteiner, Wulf. 2002. “Finding Meaning in Memory: A Methodological Critique of Collective Memory Studies.” *History and Theory*. 41(2). 179-197.
- Nelson et al.. 2015. “Value Poaching: Framing the same values for competing political end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 2881-2902.
- Scheufele, Dietram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1). 103-122.
- Scott, W. Joan. 2007. *The Politics of the Ve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미디어자료

- 경향신문. 1965/05/19. “김진만 저 『어글리 코리언』”
 _____. 1966/03/28. “월남 ‘반전’ 데모”
 _____. 1966/03/31. “월남 데모 확대일로”
 _____. 1966/06/01. “대학가의 베스트셀러”
 _____. 1966/08/15. “세계로 뻗는 메이드 인 코리어”
 _____. 1966/09/27. “내 10월 18일 ‘마닐라’서 월남참전 7개국 정상회담”
 _____. 1967/03/06. “박-뤼브케 공동성명 어제 2차 공식 정상회담 마치고 발표”
 _____. 1967/04/15. “사상최대반전데모”
 _____. 1967/10/04. “유엔에 불러 나온 월남전쟁 5개국 외상연설에 비친 대안”
 _____. 1967/12/04. “공작단 10회 공판”
 _____. 1967/12/09. “어글리 코리언 성토”
 _____. 1967/12/11. “여적”
 _____. 1968/01/09. “1명 살인 혐의 구속”
 _____. 1968/01/17. “월남의 외국기술자지위법과 기술자파월의 전망”
 _____. 1968/04/03. “독립문화상 시상”
 _____. 1968/04/13. “돌아와서 말하는 파독광부 3년”
 _____. 1969/05/03. “‘어글리 코리언’ 제지 방안 마련”
 _____. 1970/02/06. “북괴음모 규탄키로 엑스포70대책 세워”
 _____. 1970/03/02. “공화의원 다시 외유금족”
 _____. 1971/01/19. “서울 새 풍속도 김포국제공항 (8)”
 _____. 1971/11/06. “조국을 등지는 이민풍조를 배격한다”
 _____. 1975/11/29. “해외인력진출의 전기”
 _____. 1978/05/29. “택시 횡포 막을 길 없나(5) ‘어글리 코리언’ 심는 김포공항”
 _____. 1978/12/26. “세상 이렇습니다. 이창을 통해 본 직업인의 실상 <38>”

‘외국’ 로컬 직원 (6) 창구

- _____. 1981/10/03. “서울올림픽은 ‘문화한국’ 평가받을 심판대 7년 뒤엔 전 국민이 민간외교 담당자로”
- _____. 1982/02/24. “여적”
- _____. 1983/03/04. “멋뻐한 한국인상을 심자”
- _____. 1984/10/20. “‘우리 교민은 왜 단합 안 되는지’ 한탄”
- _____. 1986/01/01. “한국인 지금(1) 변하는 국민성,
- _____. 1986/09/16. “‘김포 만행’ 아시안게임 방해 책동”
- _____. 1988/08/17. “질서, 친절, 안보로 역사에 남을 ‘88’을”
- _____. 1989/02/13. “‘초보해외여행’...곳곳서 관광추태”
- _____. 1989/02/14. “‘해외 추태’ 낮 뜨겁다”
- _____. 1991/06/20. “빛나간 해외유학”
- _____. 2003/12/21. “[여적] 어글리 코리아”
- _____. 2005/11/22. “‘추한 한국인’ 언제쯤 없어지려나”
- 국민일보. 2000/07/31. “온라인 게임서도 ‘어글리 코리아”
- _____. 2014/03/30. “‘어벤져스2’ 촬영 마포대교에서 웬 농악이 ‘두 유 노 사물 놀이?’”
- _____. 2014/12/02. “해외 직구 ‘어글리 코리아’ 업체들 ‘한국인에 안 팔아!”
- _____. 2016/03/15. “나체수영에 일어자막...‘꽃청춘’ 이번엔 왜 이래요”
- 동아일보. 1965/05/25. “김진만 저 어글리 코리아”
- _____. 1965/11/12. “파월기술자 1진 12명 향발”
- _____. 1966/01/25. “파월기술자 뇌물 받고 선발”
- _____. 1966/02/1. “국군월남증파 조건 개선은?”
- _____. 1966/02/28. “파월장병, 전사자 모두 백58명”
- _____. 1966/07/05. “구주 새 시대의 태동”
- _____. 1966/07/16. “국방위 파월 보장 조건 진행 추궁”

- ____. 1966/09/10. “코리안의 고등 세계로 향하는 한국, 한국인, 한국 상품 (30) 월남 <상>”
- ____. 1967/01/12. “정치 따라 민심 따라 (4) 파병의 명암”
- ____. 1967/03/24. “유복자 ‘맹호’ 어머니마저 잃은”
- ____. 1967/03/25. “선거서전(4) 정책의 비중 <하>”
- ____. 1967/09/18. “3-4주만 단풍하면 미, 월맹 간 협상 가능”
- ____. 1967/09/25. “변모하는 동남아 취약한 한국인”
- ____. 1967/10/10. “코리안 기생족(1) 정체불명의 후조”
- ____. 1967/10/14. “코리안 기생족(2) 일부기술자들의 외도”
- ____. 1967/10/17. “코리안 기생족(3) 사이곤 환전상 올리는 사기한들”
- ____. 1967/10/19. “코리안 기생족(4) 사이곤 유흥가 누비는 탕아들”
- ____. 1967/10/24. “월남의 ‘어글리 코리언’”
- ____. 1967/11/06. “정총리의 방월과 그 성과”
- ____. 1967/11/21. “횡설수설”
- ____. 1967/12/04. “동백림 사건 공판 서독 정부대표도 방청”
- ____. 1967/12/05. “미묘한 한월관계 서로가 반성해야”
- ____. 1967/12/08. “월남서의 민간인 파렴치 빈발로 대한 감정 악화”
- ____. 1968/03/26. “나라 망신 해외진출 연예인 실태”
- ____. 1968/04/03. “본사 이연교 기자 등 3명에 독립문화상”
- ____. 1968/08/13. “한민회”
- ____. 1979/11/29. “세계의 맥박(43) 재외한인”
- ____. 1981/10/02. “올림픽 정신의 승리 서울올림픽 결정 바덴바덴의 표징”
- ____. 1987/07/01 “전 세계 민주화 추세 입증한 쾌거 워싱턴 포스트”
- ____. 1987/07/02. “한국 민주화 ‘세 가지 힘’ 작용”
- ____. 1988/05/23. “눈감은 어느 ‘필담 인생’”
- ____. 1989/12/23. “해외여행 탈선, 추태 많다”

- _____. 2015/08/20. “‘어글리 코리아’ 이젠 그만”
- 매일경제. 1966/05/02. “기술자파월계획을 재검토”
- _____. 1969/04/29. “외환법 위반구속 월남 추방 민간인”
- _____. 1975/12/05. “열풍 중동특수(7) 인력진출”
- _____. 1984/02/15. “나의 유학시절<345> 성신여대 교수 유제도 칼럼”
- _____. 1987/07/27. “차레로 줄서기”
- _____. 1988/01/01. “‘88서울올림픽’ 그 후의 한국 선진국 일원 국제 지위 격상”
- _____. 1988/01/09. “성공적인 올림픽은 내손으로’ 금지 올림픽 자원봉사협의회”
- _____. 1988/07/09. “해외여행 ‘특수 누리자’”
- _____. 1988/09/19. “질서청결의 시민의식”
- _____. 1988/11/10. “해외나들이 대중화 본격 개막 ‘세계의 품물 보러 가세요”
- 문화일보. 2006/04/05. “추한 한국인’ 출국제한 ‘인권 침해’ 논란”
- 서울신문. 2005/06/20. “한국인에 보복하러 인질극 벌였다는데”
- _____. 2005/07/08. “코레코리아”
- _____. 2006/04/05. “‘어글리 코리아’ 출국 제한키로”
- 세계일보. 2006/04/05. “‘추한 한국인’ 외국 못 나간다”
- _____. 2007/5/22. “‘해외여행문화 이대론 안 된다’ 저급한 여행문화는 공공의 적”
- 조선일보. 1965/05/13. “〈신간서평〉 풍자와 비판과 자기고백 『어글리 코리아』”
- _____. 1965/06/13. “어글리 코리아 (7) 밀회 헌팅, 무드의 농도 따라 작전, 차
비부터 생활비도 뜯어”
- _____. 1968/01/09. “어글리 코리아 8명 송환 5명을 입건”
- 중앙일보. 2005/11/21. “한국정부 ‘어글리 코리아’ 법적제재 강구”
- 한겨레. 2006/02/09. “하인스 워드, 한국엔 없다”
- 헤럴드경제. 2005/11/05. “‘어글리 코리아’ 법적 제재 수단까지 검토”

온라인자료

- 결의문(1987).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발기하면서. <http://archives.kdemo.or.kr/isad/view/00098446>(검색일, 2018.12.26).
- 국가기록원. 금기와 자율, 해외여행. <http://theme.archives.go.kr/next/tabooAutonomy/kindOfTaboo06.do>(검색일, 2018.08.04).
- _____. 해외여행 자유화.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globalTravel.do>(검색일, 2018.08.04).
- 국립영화제작소(1970). “해외여행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51145982>(검색일, 2018.12.25).
- _____. (1989). “해외여행을 배웁시다.”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singleData=Y&archiveEventId=0051145983>(검색일, 2018.12.25).
- 성명서(1987). “6.29 선언은 전 국민이 대동단결하여 투쟁한 성과이다.” <http://www.610.or.kr/board/data/view/101>(검색일, 2018.12.26).
- 신중현(1969).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노래: 김추자).” <http://www.lyrics.co.kr/?p=47666>(검색일, 2018.12.03).
- 통일부북한정보포탈, 외교활동. 수교현황.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17>(검색일, 2018.12.04).

Encounters with ‘Ugly Korean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Other’

OH, Hye Min

Ewha Womans University, Ph.D. candidate

This paper focuses on the usage of the expression ‘ugly Koreans’ in the period from 1965 to the early 1970s and in the late 1980s. ‘Ugly Koreans’ was an expression which appeared and spread in the course of historical events involving ‘encounters,’ such as the dispatch of Korean troops to Vietnam, the migration of Korean labor to Germany and Saudi Arabia, the Seoul Olympic Games, and the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in Korea, and was used as the excuse for failed foreign affair policies or to justify state control. Moreover, the memory of this popular expression shaped the norms of everyday life and, at the same time, contributed to creating illusions of a ‘new Korea’ under the post-Cold War system. Although this expression was used with different intentions depending on the context, the usages of ‘ugly Koreans’ had the common effect of defining the boundary between ‘Koreans’ and ‘Korea.’ This study reveals how the use of ‘ugly Koreans’ was a process of ‘distinction’ which defined the boundary of ‘Koreans’ by explaining three aspects of this process. First, criticism of ‘ugly’ behaviors, seen as such from the imagined perspective of the ‘other’ strengthened the norms tied to national and capitalist interests. Second, the categorization of ‘Koreans’ pervaded the society as a whole, making the process of ‘distinction’ a part of

daily life. Lastly, through this process, what is 'ugly,' and thus, outside the norm, became considered as 'strange' to be subsumed under the category of the 'other.'

■ **Keywords:** Ugly Korean, Liberalization of Overseas Travel, Otherization, National Identity

투고 : 2019/03/27 심사 : 2019/04/10 확정 : 2019/04/29